

전국 첫 광주 최종증 발달장애인 돌봄 '위태'

1년여만 정책전문관 없어지고
전담팀 강제폐사 위기 등 민낯
이명노 시의원 "안정화 시급"

광주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24시간 1대1 최종증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이 관리운영 등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책시행 1년 반만에 정책전문관이 없어지고

전담지원팀 종사자들이 강제폐사를 앞두는 등 위태롭고 허울뿐인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민주당·서구3·사진)은 25일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종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이 시작된 지 1년 반 만에 연구용역 사전 내정 의혹, 종사자 고용안정 문제 등 위태로운 민낯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종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은 최종증

애인 돌봄 사업으로 개인과 가족이 지는 돌봄의 짐을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지는 일환으로 광주시가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발달장애인 지원정책발굴 TF팀을 꾸리고 '최종증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정책전문관 제도를 도입했다. 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내 지원팀을 신설해 최종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 전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3년간 45억의 국비를 지원받는 융합돌봄사업은



최근 정책전문관이 사라졌다"며 "사업을 총괄하는 지원팀을 비롯해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계약직 또는 시급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용되고, 대상자 선정과 교육, 지도·감독, 기획·조정 업무를 총괄하는 지원팀 또한 전일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올해말 강제폐사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한 고용안정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안

정적 공공 돌봄을 지향했던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역대 연구용역까지 특정인으로 사전 내정돼 진행됐다는 의혹이 불거고, 조건에 미달된 특정단체 자녀 사업 참여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정책전문관을 복원하고 지원팀과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최초 설계한대로 추진하는 한편 연구용역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공개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한서린 울부짖음으로 시작된 사업이 전국 최초라는 그럴싸한 이름 뒤에서 여러 폐해만 양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돌봄사업의 안정화를 바탕으로 장애인 정책이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길용현 기자



신용행정복합타운 개관식
강기정 광주시장이 25일 오후 북구 신용도서관에서 열린 '신용행정복합타운 개관식'에 참석해 문인 북구청장, 시의원, 주민 등과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박필순 시의원 "강기정 시장, 소통·협치해야"

광주시의회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3)은 25일 "강기정 시장은 소통과 협치 강화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제30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시장께서는 빠른 추진력과 창의적 행정으로 광주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했다"면서 "이 모든 변화는 시민과 의회와의 소통·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보 공개와 소통에 있어서 약속과는 달리 큰 아쉬움을



남겼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가진 시민사회라 할지라도 먼저 다가가 설명하고 설득하는 정무적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의 대표와 의회화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광주형 대화모델' ▲충분한 정보 공유를 위한 시민중심 '정보소통플랫폼' 등 시민참여행정 4가지 안을 제안했다. /길용현 기자

신수정 시의원 "수어통역센터 정상화 나서라"

광주 1만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광주수어통역센터 정상화를 위해 광주시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민주당·북구3)은 25일 제30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2019년 10월 광주수어통역센터 폐쇄 이후 정상화를 위해 여러 차례 TF운영과 간담회를 마련해 대안이 제시됐지만 집행부는 요지부동이었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장애인복



지시설 사업안내)과 광주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장은 수어통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며 "집행부는 수어통역센터 정상화를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지닌 법인, 기관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길용현 기자

"E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이주대책 급하다"

박문옥 도의원, 안전 위협 질타
전남지역에 재해위험 가능성이 높은 'E(불량)' 등급 공동주택이 모두 6개동에 이르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이주 노력과 재해방지 대책 없이 상당수 주민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은 최근 열린 제364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내 'E' 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현황을 지적하며 전남도와 해당 시·군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 'E'는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협이 있어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다. 박 의원은 "전남도내 공동주택 중 총 6개동이 이미 오래전 'E' 등급으로 진단을 받았음에도 전남도와 지자체가 재해 예방을 위한 어떠한 행정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주거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사유재산에 대한 공공관리 주체의 책무가 있음에도 사용승인 변경이나



이주대책 마련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의 역할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안전에 있어서는 모든 도민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이 재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오선우 기자

전남관광재단, 숨은 해안명소 발굴 나선다

영광~광양 16개 시군 전수조사
(재)전남관광재단이 지역의 숨은 해안가 관광자원 발굴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앞서 재단은 지난 5월 '전남 해안선 마을 관광자원 DB구축'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디지털 뉴딜 사업인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재단은 앞으로 코로나19 이후 정정 해양관광지를 찾는 소규모 관광객에게 전남의 덜 알려진

진 해안가 관광자원을 알리고, 숨겨져 있던 자원을 활용해 전남 여행상품 개발에 활용가능하도록 DB 구축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전남 주요 섬과 영광에서 광양까지 16개 시군(나주, 장성, 담양, 곡성, 구례, 화순 제외) 해안 인접마을 119개 읍·면(혹은 동)의 595개 리를 조사해 자세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한다. 수집 데이터는 해안선마을의 ▲관광자원 ▲숙박시설 ▲휴게시설 ▲산책로 등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로 활용된다. /오선우 기자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에서 사업 파트너를 찾습니다

“개발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계신 분”
“개발 사업 부지를 증계하고자 하시는 분”
“소유하고 계신 부지의 개발 파트너를 찾는 분”

성공을 위해 함께하는 골드클래스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G 골드클래스(주)
 G 보광종합건설(주)

■ 문의 : 062) 233-3999 (내선 500, 503)
 010-3637-3735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화정동)